



## 1 미국, 농업의 규모화<sup>1)</sup>

- 지난 30년간 미국 농경지는 중농경지(100-999에이커)에서 대농경지(2,000에이커 이상)로 규모화가 이루어짐.
  - 1987년 농지면적의 57%는 중농경지였던 반면, 대농경지는 15%에 불과했음.
  - 2017년 중농경지 비중은 33%로 떨어졌지만, 대농경지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41%까지 높아짐.
  - 옥수수의 경지면적 중간값은 1987년은 200에이커에서 2017년 685에이커까지 증가했고, 면화, 쌀, 대두, 밀의 중간값 증가 또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1) 미국 USDA-ERS의 "Consolidation in U.S. Agriculture Continues"(2020.2.3.)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 국제 농업 정보 II (2020. 4.)

- 미국 전체 경지의 농경지는 44%를 차지하고 있고, 목초지와 방목장은 4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경지 규모 통합 추세와는 달리 목초지와 방목장의 규모 통합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1만 에이커 이상의 목초지와 방목장을 소유한 농가는 1987년 51%에서 2017년 43%로 감소함.
- 축산의 규모화는 커지고 있지만, 축종별로 증가 추세가 상이함.
  - 주요 축산의 규모화는 낙농, 돼지, 산란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젖소의 중간값은 1987년 80마리에서 2017년 900마리로 크게 증가하였음.
  - 반면, 소에 대한 규모화는 1987년 89마리에서 2017년 120마리로 다른 축산의 규모화 증가세보다 지체되고 있으며, 특히 목초지나 방목장에서 기르는 소에 대한 규모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쉽고 빠르게 더 많은 경지면적과 가축을 관리할 수 있는 농지기계 및 장비 구축이 농업의 규모화를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소시장은 아직까지 규모화를 이끄는 요인들의 발전이 더딤.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3.2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 유럽, 농식품 산업 디지털화: 기회와 도전<sup>2)</sup>

- 최근 EU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위성사진), 식품 손실 감소(머신러닝), 동적 가격 책정(전자가격표시기), 식생활 정보 제공(데이터베이스 구축), 효과적 교육·훈련(가상현실·증강현실)을 도모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은 미래 농식품 산업 변화를 위해 필수적이거나, 세심한 정책 설계가 없다면 i) 에너지 낭비, ii) 시장 집중화, iii)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iv) 소농들의 대기업 경제적 종속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사회가 데이터 관리, 자산 분배·조정, 계약 협상을 직접 수행하는 분권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농식품산업 디지털화를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정책 영역은 다음과 같음.

2) 유럽정책연구센터(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CEPS)가 발간한 "Digitising Agrifood: Pathways and Challenges"(2020.12.)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 1) 적절한 연결성 보장: 농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넓은 커버리지와 낮은 비용 수준 유지 필요
- 2) 모든 기술을 활용: 연결성이 보장되면 모든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해 양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기술 투자과정에 공적 재원 투입이 가능
- 3) 기업가 정신 고취, 역량 향상: 데이터 기반 농업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지도 체계(extension system)가 필요하며, 특히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도록 거버넌스와 표준 기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 4) 분권화된 거버넌스를 통해 데이터 창출·공유: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 지역사회 책임과 권한 점진적 강화
- 5) 농업인·유통업자·데이터 관리자 간 교섭력 재조정: 대형 유통업체와 데이터 관리자들이 소농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개입
- 6) 유통과정 상 부정적 외부효과 내재화: AI 개발자가 기술 활용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소비량·환경비용 정보를 공시하면 보조금이나 세제상 혜택 부여
- 7) 유통과정 단축에 인센티브 부여: 디지털 기술을 통해 농식품 유통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유도<sup>3)</sup>
- 8) 식품 손실 감소와 과다자원 재배분: '앱(app)'경제 활성화를 통해 유통기한 만료가 가까운 식품의 가격을 즉각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제고
- 9) 데이터 관리 윤리·정책체계: 데이터 보호(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정보 사용 금지)와 차별 금지 관련 규정 명확화, 넛징(Nudging)<sup>4)</sup>을 통해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농식품을 구매하도록 유도
- 10) 농업인 역량과 인지도 향상: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해 교육·훈련이 필요, 온라인 수업이나 원격 학습 등이 유용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3.3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예를 들어, 식품 공급 과정을 플랫폼화함으로써 탐색비용 없이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시킬 수 있으며, 블록체인을 통해 식품 이력추적성을 높일 수 있음.

4) 간단한 방식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것을 뜻함.



### 3 일본, 디지털 지도를 활용한 농지정보 관리 추진<sup>5)</sup>

- 일본 농림수산성은 자율주행 농기계, 스마트 농업 등 IT 기술 확산에 따라 정책부문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음.
  - 디지털 지도 외에도 농가 행정 절차 온라인화(공통 신청 서비스), 농업 신기술(자율주행 농기계, 드론 등), 간편하게 농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MAFF(농림수산성)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성화하고자 함.
- 또한 농림수산성은 2020년 3월 17일 디지털 지도를 활용한 농지정보의 일원적 수집·관리 방법 및 효과적인 활용방법 검토 결과와 함께 농업인과 행정기관의 부담을 감소하고 정확한 농지정보 확보를 위한 방침을 발표함.
- 현재 농지정보는 각 제도와 정보수집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집·관리되고 있음. 이로 인해 농지정보 관리, 현장 조사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며, 기관 및 제도별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또한 농업인은 각 제도를 신청할 때마다 농지정보를 종이서류에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함.
- 디지털 지도는 농지구획 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과 농림수산성 공통 신청서비스(농가 행정 절차 온라인화)를 활용하여 행정기관에 수집된 농지정보를 결합한 지도임. 디지털 지도에 의한 농지정보 관리를 통해 다음의 효과가 기대됨.
  - 종이서류 제출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을 통한 창구 일체화(원스톱), 기존에 입력한 정보 재입력 생략 등 농업인 편리성 향상
  - 농지정보 일원화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갱신 용이성 향상, 정보 일치도 향상
  - 태블릿 단말기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정보 확인을 통한 행정기관 관리업무 효율화
- 디지털 지도는 △농업에 자율주행, 위성측위시스템(GNSS)<sup>6)</sup> 및 드론 등 최첨기술 적용, △위성 영상을 통한 현황 및 재해 상황 파악, △사람·농지플랜(지역 목표 계획) 및 농지 개량사업에 관한 정확한 파악 등에 활용 가능할 것임
- 향후 디지털 지도 추진에 있어 필 폴리곤(농지구획 정보) 주소 정보, 농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농업인

5) 일본 농림수산성 「デジタル地図」を活用した農地情報の管理に関する検討会取りまとめ概要(2020.3.17.), 일본경제신문 「農地情報 デジタル地図に 農水省が一元化 規模拡大後押し」(2020.2.3.)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6)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지상물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임.



ID 체계 설계, 농지 데이터 표준화 등의 실태 조사가 필요하며, 시스템 구축, 편리성·범용성, 상호 운용성, 신뢰성, 지속성, 가용성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3.2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4 일본, 2019년도 식량·농업·농촌백서 주요 내용

-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 입각하여 전년도 식량·농업·농촌 동향 및 정책을 매년 5월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주요 내용을 공개함.
- 2019년도 식량·농업·농촌의 동향과 2020년의 식량·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본 내용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2019년도 식량·농업·농촌 동향〉
<p>〈특집 1〉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에 새롭게 발표될 기본계획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정책 평가 및 과제, 정책 추진 관점, 식량자급률·자급력 목표, 식량 안정공급, 농촌진흥, 지속적인 농업 발전, 동일본대지진복구, 농업단체 등에 대한 사항</li> </ul>
<p>〈특집 2〉 여성 농업인 역할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농촌에서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여성 농업인이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환경 정비 필요</li> </ul>
<p>〈토픽 1〉 식량·농업·농촌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UN 정상회담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발표, 농업·식품산업은 자연과 환경을 활용하기 때문에 SDGs 달성에 솔선하여 공헌, 소비자 행동 및 타 분야로부터 투자를 주도하여 새로운 성장 가능성으로 연결</li> </ul>
<p>〈토픽 2〉 미·일 무역협정 발효와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1월 발효, 일본 측 관세는 TPP 범위 내, 쌀은 관세삭감 대상에서 제외, 소고기 수출에 관한 저관세 확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농림수산업 생산기반 강화 및 시장 개척 추진</li> </ul>
<p>〈토픽 3〉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식문화 알리기 위해 선수촌 등에서 일식 제공 및 국산 식재료 활용 추진,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꽃을 올림픽 시상에 사용하여 지역 부흥 추진</li> </ul>
<p>〈제1장〉 식량 안정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식량자급률과 식량자급력 목표)</b> △자급률...이상기후로 밀 생산량 감소 등에 의해 전년 대비 감소(공급열량기준 37%, 생산액 기준 66%), △자급력...서류는 추정 에너지 필요량 상회, 쌀·맥류·대두는 하회,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농지 규모화·단지화, 신규 취농인 촉진 등의 생산기반 강화와 소비자에 대한 국산농산물 소비확대 등 추진 필요</li> <li>• <b>(세계시장 전략적 개척)</b>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촉진, 일식·식문화 해외 전개, 규격·인증제 활용, 지적재산 활용</li> </ul>

7) 일본 농림수산성 「令和元年度食料・農業・農村白書骨子(案)」(2020.3.19.)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 국제 농업 정보 II (2020. 4.)

## 〈2019년도 식량·농업·농촌 동향〉

- **(세계 식량 수급과 식량 안정보장 확립)** 세계 식량 수급 동향(인구증가와 소비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 증가, 기후변화에 의한 식량 안전공급 불안), 종합적인 식량안보 확립, 농산물 무역 교섭, 국제 관계 유지·강화
- **(식량 소비 동향과 식생활교육)** 건강지향, 안전지향, 국산 선호는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성, 간편화, 맛은 연령이 낮을수록 지향, 식생활교육 추진 및 일식 문화 보전·계승
- **(식품 안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원료관리제도를 통해 비료 관리, 유전자조작 농산물 사용 허가에 따라 사용 업체는 관계 부처에 정보 공개
- **(동식물 방역)** 사육위생 관리 지도 및 백신 벨트 구축,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방지 및 발생 시 대응, 야생동물 감염 대책 강화, 농장 사육위생관리 강화, 축산물 수입 검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추진, 식물 병해충 방지를 위한 수입 식물 검역, 침입 병해충에 대한 긴급 방제 시행
- **(식품산업 동향)** 전년 대비 간편 식품 생산액 증가, 2019년 7월 노동력 부족 극복 비전 발표(종업원 의욕 향상, IT·기기설비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다양한 인력 활용), 식품 손실 감소 법률 시행,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액션플랜, 플라스틱 자원순환 전략 책정
- **(생산·가공·유통과정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2017년 농업인이 가공·판매한 농업생산 관련 사업의 연간 총판매액은 2016년 대비 769억 증가한 2조 1,044억 엔, 경영개선을 위해 지원 체제 구축 추진

## 〈제2장〉 강한 농업 만들기

- **(농업생산액과 생산농업소득 동향)** 농업총생산액은 채소, 돼지, 달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한 9조 1천억 엔, 2018년 경영체 당 농업소득은 시설채소 및 과일은 전년 대비 증가, 벼농사, 낙농, 비육우는 감소
- **(농업 구조개혁 추진)** 농지중간관리기구 활용을 통한 농지 규모화·단지화, 후계자(주요농업인) 동향 및 인력 강화, 수입(收入)보험 시행
-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보전관리)** 농지 대구획화, 논 활용도 확대·밭 활용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 수리시설 수명 연장
- **(쌀 정책개혁 동향)** 2018년산부터 생산 수량 목표 배분 폐지, 산지·생산자 주도 생산·판매 추진, 주식용 쌀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략 작물 및 고수익 작물로 전환 추진, 지난 5년간 사업용 쌀 수출 4배로 증가
- **(주요 농축산물 생산 동향)** △밀·대두·쌀의 영향으로 밀 생산량 증가, 국산 밀·대두 수요 상승에 따라 품질·수량 안정을 위한 대응 추진, △채소·쌀의 영향으로 생산량 감소, 가공·업소용 수요 증가, △과실·기후 영향으로 생산량 증가, 노동생산성 향상 필요, 식품 섭취 외부화·간편화에 대응한 가공품 공급 추진, △잎담배·경작자 고령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축산물·농가는 감소하는 반면 대규모화 진행
- **(생산현장 경쟁력 강화 추진)** 스마트 농업 추진, 농작업 안전 대책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정책 추진)**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적응 대책 추진, 친환경 농업 추진
- **(농업을 지탱하는 농업 관련 단체)** 농업인 소득 증가를 목적으로 한 자기 개혁 추진, 농업위원과 별개로 농지이용 최적화 추진회 설치를 통한 농지이용 최적화 활성화

## 〈제3장〉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진흥 및 활성화

- **(농촌 현황과 지방 창생 동향)** 2045년까지 모든 지역에서 인구감소가 예상, 최근 도시 청년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흐름 확대, 향후 농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의 농촌 유입 추진
- **(중산간지역 농업 진흥)**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향상을 위해 기반 정비 활성화
- **(체류형 농촌관광을 중심으로 한 도시와 농어촌 공생·교류)** 농촌관광을 비즈니스로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지역을 채택하여 지원, 외국인 관광객 여행자를 위한 'SAVOR JAPAN(식당 소개)' 지역 추가(총 27곳)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발휘)** 직불금 활용을 통해 비농업인 참여를 확대하고, 농업 수리시설 등 적절한 보전관리, 농지 감소 방지(7만 5천ha), 온실가스 감소(14만 톤 감소) 등에서 효과
- **(야생동물 피해와 수렵육)** 야생동물 피해 현황과 대책(ICT 이용) 추진, 수렵육 소비 증가 중



국제 농업 정보 II (2020. 4.)

〈2019년도 식량·농업·농촌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재생가능 에너지 활용)</b> 총 발전전력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4%로 향상, 가축 배설물을 이용한 에너지 지산지소(지역생산 지역소비)를 위해 바이오가스 플랜트 도입 지원</li> <li>• <b>(도시농업 진흥)</b> 도시 주민의 71%가 도시농업과 도시에 농지를 남겨놔야 한다고 응답, 도시농지대차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의 농지 대차가 가능</li> <li>• <b>(농업과 복지 연계 추진)</b> 농촌과 복지 연계 인지도 향상, 매칭 구조 구축, 전문 인재 육성, 시설 정비 추진</li> </ul> <p>〈제4장〉 재해 피해복구와 재해 방어 및 감소, 국토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019년도 재해 피해복구)</b> 자연재해로 인한 농림수산업 피해 증가, 이에 대한 대응 확대</li> <li>• <b>(동일본대지진 복구, 구마모토 지진 복구)</b> 영농 재개 지원</li> </ul>

〈2020년도 식량·농업·농촌 정책〉
<p>I. 식량자급률·식량자급력 유지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자급률·식량자급력 유지 향상을 위한 대응    • 주요 품목별 생산 노력 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li> </ul> <p>II. 식량의 안정공급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수요 개척    • 글로벌시장 전략적 개척    • 소비자와 식품·농업 연계 확대</li> <li>• 국제적인 동향 등에 대응한 식품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li> <li>• 식량 공급의 위기에 대응한 종합적인 식량안보 확립</li> <li>• TPP 등 새로운 국제환경 대응, 향후 국제 교섭에 전략적 대응</li> </ul> <p>III. 농업의 지속적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구조의 실현을 위한 후계자(주요농업인) 육성·확보</li> <li>• 농업현장을 지탱하는 다양한 인력 및 주체의 활약</li> <li>• 농지 규모화·단지화와 농지 확보    •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li> <li>• 농업 성장 산업화, 국토 강화에 이바지하는 농업 생산기반 정비</li> <li>• 수요 구조 등의 변화에 따른 생산기반 강화와 유통·가공 구조 합리화</li> <li>•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여 농업 생산·유통 현장 혁신 촉진</li> <li>•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 환경정책 추진</li> </ul> <p>IV. 농촌진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과 고용 기회 확보    • 농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 정비</li> <li>• 농촌을 지탱할 새로운 움직임 및 활력 창출    • 소관 부처 연계 구조 구축</li> </ul> <p>V.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과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    • 대규모 자연재해 대비    •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복구</li> </ul> <p>VI. 농업 관련 단체</p> <p>VII. 식품과 농업에 관한 국민운동 전개 등을 통한 국민적 합의 형성</p> <p>VIII. 종합적·계획적 식량, 농업 및 농촌정책 추진</p>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3.3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5 일본, 제5기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 확정<sup>8)</sup>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0년 3월 31일 ‘일본의 식품과 활력 있는 농업·농촌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기 위해’라는 부제로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함.
  - 식량·농업·농촌 기본법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침을 정세변화 등에 따라 2000년부터 5년마다 발표하고 있음.
  - 에토(江藤) 농림수산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i) 경영 규모, 조건불리지역 등의 조건과 관계 없는 생산기반 강화, ii) 수출촉진, iii) 소관부처 연계를 통한 농촌정책 추진, iii) 식품과 농업 연계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 v) 식량국산을 설정 등 다섯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함.

### 〈기본 방향〉

- 기본계획 추진에 있어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의 두 축을 중심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식량자급률을 향상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함.
  - (정책추진 관점) △소비자와 실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책, △식량안보 확립과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이해 형성, △농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재육성·확보와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 △스마트농업 도입 가속화와 농업 디지털 전환 추진, △지역 정책 종합화와 다원적 기능 유지·발휘, △재해 및 가축 질병, 기후변화 등 농업의 지속성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 △농업·농촌 소득 확대를 위한 정책추진, △SDGs(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대응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

### 〈식량·농업·농촌 현황〉

- [농정 개혁]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은 212년에 4,497억 엔에서 2019년에는 9,121억 엔, 농업생산 소득은 2014년에 2조 8,000억 엔에서 2018년에 3조 5,000억 엔, 청년층 신규 취농인 수는 2009~2013년 평균 1만 8,800명에서 2014~2018년 평균 취농인 수는 2만 1,400명으로 증가함.

8) 일본 농림수산성 「食料・農業・農村基本計画(令和2年3月31日 閣議決定)」(2020.3.31.), SankeBiz「農政、問われる政策遂行力向上 生産基盤は弱体化に直面」(2020.4.1.)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 **[국내외 환경 변화]** ① 국내 시장 축소와 해외 시장 확대(인구감소, 소비자 요구 다양화), ② TPP1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일 무역협정 등의 새로운 국제환경, ③ 빈번해지는 대규모 자연재해, 새로운 감염병, ④ 돼지콜레라(CSF) 발생·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에 의해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
- **[생산기반 약화]** 농업 취업자 수와 농지면적 감소하고 있음.

### 〈목표 및 전망〉

- **[식량자급률 목표]** 칼로리 기준(식량안보 상황 평가)은 37%(2018년)에서 45%(2030년)로, 생산액 기준(경제활동 상황 평가)은 66%(2018년)에서 75%(2030년)로 상향함.
  - 사료자급률은 25%(2018년) → 34%(2030년), 식량국산율<sup>9)</sup>은 칼로리 기준은 46%(2018년) → 53%(2030년), 생산액 기준은 69%(2018년) → 79%(2030년)로 상향
- **[식량자급력 목표]** 식량 잠재생산능력으로 농지면적 및 노동력 감소를 고려하여 목표 및 2030년 전망 제시함.

### 〈구체적 정책〉

- **[식량 안정공급]**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수요 개척, △세계시장 전략적 개척(2030년까지 농림 수산물·식품 수출액 목표 5조억 엔), △소비자와 식품·농업 연계 강화, △식품 안전 및 소비자 신뢰 확보, △식량 공급 위기에 대응한 종합적인 식량안보 확립, △TPP 등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응, 전략적 국제 교섭 등이 있음.
-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후계자(주요 농업인) 육성·확보(법인화 가속화, 경영기반 강화, 경영 계승, 신규취농과 정착 촉진 등), △다양한 인재 및 주체의 활약(중소·가족 경영, 농업지원 서비스 등), △농지 규모화·단지화와 농지 확보(사람·농지플랜 활용 확대, 농지중간관리기구 활용 등), △농업경영 안정화(수입(收入)보험 제도 및 경영소득안정 대책 추진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업 성장산업화와 국토 강화를 위한 기반정비), △수요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생산기반 강화와 유통·가공구조 효율화(품목별 대책, 농작업 등 안전대책 추진 등), △농업생산·유통현장 혁신 촉진(스마트농업 가속화, 디지털기술 활용 추진 등), △환경정책 추진(기후변화 대응, 유기농업 추진, 자연순환기능 유지 증진 등) 등이 있음.

9) 식량자급률을 반영하여 국내생산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새롭게 설정함.



## 국제 농업 정보 II (2020. 4.)

- 동일본 대지진 피해복구와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과, 농업 관련 단체에 관한 정책, 코로나 19를 포함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있음.
- 이상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① 국민 관점·현장주의에 입각, ②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 결정 (EBPM) 추진·프로젝트방식으로 관리, ③ 효과적·효율적인 정책추진, ④ 행정 절차 디지털 전환, ⑤ 관계자·소관 부처 연계, ⑥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공헌하는 친환경 정책추진, ⑥ 재정 효율적·중점적 운용이 필요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4.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